

‘명품 리셀’ 젊은 세대 노린다…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3년간 온라인 범죄 7,800여건
대포폰·통장 범인 검거 어려워
“신분·물품 확인 후 거래 필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대학생 박 모씨(24)는 최근 1,000여만원 상당의 중고 거래를 시도하다 상대방이 돌연 잠적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SNS에서 알게 된 업자 A씨는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박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업자 A씨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크게 명품 사업을 한다’, ‘유명인이 한두 번 착용했던 것을 그대로 수입해오니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며 유혹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A씨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물을 몇 년간 운영해 왔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진행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다고 전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1월 유명 명품 브랜드 P사와 D사의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원가의 50% 정도인 1,000여만원을 선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초 돌연 잠적해 연락 두절됐다.

박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했다”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명품 리셀이 유행하고 있고, 용돈벌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덜컥 뒀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리셀(인기 있는 물건을 제 가격이나 비교적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되팔아 돈을 버는 일) 열풍’과 경제적 부담이 큰 젊은 층

을 대상으로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2020년 3,227건, 2021년 2,235건, 2022년 2,344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기가 꾸준히 발생한 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2030세대의 명품 리셀 열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중고 명품 거래는 고이비토, 구구스, 필웨이 등 오프라인 매장이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졌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명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중고 거래 플랫폼 ‘ㄷ 사’에 명품가방을 검색해 보니 광주 지역에서만 70여 개의 물품이 거래 중이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위치·개인정보 인증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SNS에서 피해자들과 거래를 유도했다.

이날 기준 더치트(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에 A씨의 계좌·전화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해 건수는 770건, 금액은 24억 1,400만원에 달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직장인 차 모씨(24)는 “제값을 주고 명품을 구매하기엔 부담돼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다”며 “각종 방법으로 본인 신분과 거래가 안전하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검거 인원은 428명에 그치는 등 가해자들은 대포폰·통장을 활용해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싼 가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거래는 진위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구매자의 신분과 상품 상태, 유통 절차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찬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그를 돕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시민단체 “면죄부 준 대통령, 탄핵 사유”

한일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광주 시민 사회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가해국 기업에 배상 책임 면죄부를 준 피해국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광주 시민사회단체·정당 40곳은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배상 책임 면죄부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30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다녔다”며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또한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피고 일본 국가와 미

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이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일본으로부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자속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와 같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찬기 기자

누범기간 음식점서 금품 훔친 60대 영장

누범기간 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4일 오후 9시 36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음식점에

서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과 25범인 A씨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업주가 자리를 비우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4월 출소해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환준 기자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235건…전국 1위

전남지역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남지역에서 235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

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8건, 2020년 63건이며, 2021년에는 74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14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 8개 도단위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경북 211건, 충남 151건, 경남 135건, 경기 118건, 충북 110건, 전북 81건,

강원 58건 순으로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농촌지역이 많고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5%에 달해 노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일 전남지역 농기계 후미 추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화대학교, 다하시스템즈와 동작센서기반 경광등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혜린 기자

여보야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A.I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다운로드 ONE store